

6만6천 전북도민의 안전 보장을!

조배숙 의원, 산업부 장관에 한빛원전 안전대책 강화·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신설 촉구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북도 에너지 정책의 현안인 한빛원전의 안전대책 문제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포함 지자체의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이산)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원전 비상연락망 강화 등을 비롯한 한빛원전안전대책 안전강화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포함 지자체의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조항 신설에 협조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강력 촉구했다. 조 의원은 지난 7일 입시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장관에게 요구한 바 있다.

자력의 '비상연락 표준절차서'에는 해당 발전소,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안전대책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는 유사시 상황 전파 우선순위에 '핵심요원'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정작 상황에 대응하여 현장에서 주민을 보호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는 '비핵심요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비핵심요원은 비상 발령단계 아래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1시간이 이상 지연된 후이나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아 상황대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 5월 한빛원전 1호기 열출력 사고 발생 당시 고창군을 비롯한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는 사고 경위에 대한 설명 없이, 수동경지 사실을 통보하는 문자만을 수신 받은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지역자원시설세 일부개정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전향적인 노력을 거듭 촉구했다.

특히 조배숙 의원은 "지난 7월 입시회에서 성운모 장관에게 지역자원시설세법 개정 등 한빛원전 인근 지자체의 방재역량 강화를 촉구했음에도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의 검토와 조치가 전혀 없었다"며 "산업부가 한빛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거주하는 6만 6천명의 전북도민의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조배숙 의원은 "한빛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절반을 관할하는 전북도가, 행정구역 상 원전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예산지원과 정보공유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지자체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한빛원전의 영향을 똑같이 받는 전북도가 합당한 지원을 받도록 조속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최영심 의원 "각 학교 후드 청소 예산 학교 운영비 편성 관리 감독해야"

그동안 학교 식생활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후드 청소로 인해 낙상 등 산업 재해를 당하는 일이 빈번했다.



지난 4월에도 도내 학교에서 급식노동자가 후드 청소 중 낙상으로 갈비뼈 3개가 금가는 심각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후드 세척 약품이 얼굴에 떨어지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한다.

이와 같은 안전사고를 줄이고자 지난 2017년 전라북도교육청과 전북학 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체결 단체협약에는 위험한 공간의 대청소는 학교실 정에 따라 연 2회 의무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되었다.

로 그 비율이 줄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도 감지되지만, 전문업체에 의주화한 학교의 95.1%는 1년 동안 단 1회만 의뢰한 것으로 드러나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

또한 후드청소를 전문업체에 의뢰할 때, 지출되는 학교 예산항목은 학교(기본)운영비가 69.32%, 급식운영비가 28.57%로 나타났다. 후드 청소가 지출되어야 할 예산항목은 학교(기본)운영비가 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급식운영비에서 지출하는 문제점이 드러난다. 급식운영비에서 지출할 경우 급식의 질 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문제점은 학교에서 후드청소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 급식운영비로 예산 편성하는 점이다. 후드청소로 인한 산재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복교육청이 학교에서 기본운영비에 반드시 연2회 이상의 후드청소 비용을 예산편성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지도 감독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산재 발생이 많았음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핵심 조항에서는 적용 제외되었던 학교 급식실이 지난해부터 전면적용 대상이 되었다.

그에 따라 올해 각 시도교육청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보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각종 산재예방 활동을 펼쳐 노동자들의 산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3월부터 시작한 전복교육청의 산보위 구성을 위한 노사간 협의는 구상원료를 눈앞에 두고도 단연히 두어야 할 실무 간사 문제로 본회의조차 개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과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 협약에도 후드 청소를 의무적으로 전문 업체에 의주화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학교실정에 따라, 하도록 지도한다'는 유무명실한 문구에 그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이상 후드 청소는 안전사고의 위험 속에서 급식노동자들이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교육청의 답변은 학교의 재량이라는 답변으로 문제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영심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두고 "노동자의 안전은 예산과 재량을 이유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전복교육청이 일선 학교 기본운영비에 반드시 연2회 이상 후드청소 비용을 예산 편성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지도 감독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신속하게 설치, 운영하여 노동자들의 산재예방에 철저히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민형 기자



최초 공개되는 세계최고 금속활자 101점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위원장, 정재숙 문화재청장과 의원들이 최초 공개되는 세계최고 금속활자 101점을 보고 있다.

당정, 특수고용 27만명 내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내년 7월부터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 노동자) 27만명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하겠다"며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노동자로 불리지 못하는 특

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하겠다"며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보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대표적으로 특수근로 형태 종사자·중소사업주·1인자영업자 등을 언급하며 "그동안 근로형태가 다양화되면서 보호 필요성이 높은 직종도 증가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기존의 근로자

에서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재편해 특고 종사자로 확대할 뿐 아니라 적용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가 현행 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 인식하고 이를 넓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작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방문서비스와 화물 운송서비스 분야의 특고 종사자 조정을 확대하겠다. 돌봄서비스와 IT(정보 기술) 업종 종사자에 대해서도 내년에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 엄중하게 들어"

문 대통령, 조국 찬반 집회에 처음으로 입장 밝혀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찬반 여론이 표출된 각 진영의 대규모 집회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표출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며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대의 정치가 충분히 민

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국민들이 직접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본다"며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직접 목소리를 내주시는 국민들께 감사 드린다"고 언급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정치적 의견의 차이나 활발한 토론 차이를 넘어서서 깊은 대립의 골로 빠져들거나 모든 정체가 그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많은 국민들께서 의견을 표현하셨고 온 사회가 경청하는 시간도 가진 만큼 이제 문제를 철차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대의 정치가 충분히 민

문 대통령은 "정치권에서도 산적한 국정과 민생 전반을 함께 살펴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린다"며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못지 않게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 모두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회는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주시기 당부 드린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법무부와 검찰도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는 한편 법 개정안 없이 할 수 있는 개혁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검찰 개혁에 있어 법무부와 검찰은 각자 역할이 다를 수는 있지만 크게 보면 한몸이라는 사실을 특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시스

축! 전주매일 창간

http://council.namwon.go.kr

시민이 행복한 세상,
남원시의회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 ☑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민생의회**
- ☑ 공부하고 연구하는 **정책의회**
- ☑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

